

# ‘지옥의 공장’ 아닌 ‘친환경 방목장’ 만들어야



##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살충제 계란 뿐만 아니라 매년 고병원성 조류독감(AI)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터져나올 때마다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자칫 국내 축산물 사육 환경이 세계적인 기준에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일부 선진국은 지난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참여 저조... 전남 15곳 불과 밀집 사육 금지법 만들고 시설 개선 등 적극 지원 필요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밀집 사육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20년 전부터 공장식 밀집 사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럽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도 공장형 밀집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글로벌 대형 유통·식품기업들도 공장형 밀집 사육 퇴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월마트와 영국의 테스코도 케이지 계란 판매를 중단하고 방목 등의 건강한 방식을 통해 얻은 계란으로 전환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기업인 맥도날드는 2015년 9월 처음으로 향후 2025년까지 100% ‘방목형’ 달걀만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스타벅스와 네슬레 등 각종 대형 식품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산란계를 시작

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참여 농가가 극히 적은 것이 문제다. 제도 도입 5년이 지나도록 정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전국적으로 92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산란계 농가는 15곳이다. 국내 산란계 농가 1464곳 중 5%에 그치는 수치다.

정부는 산란계 이후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육우·젖소·오리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농가 참여는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밀집 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는데다, 초기 투자비용과 정부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농가의 외면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AI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공장형 축산보다 동물복지형 축산이 더 경제

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등에서 공장형 밀집사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사 시절 친환경 농산물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국민의당 박준영(무안·영암·신안) 의원은 23일 공장형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사육환경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밀집 사육 금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전·현 농림장관, 식약처장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

### ‘살충제 계란 파동’ 책임 물어

시민단체가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보전시민센터는 23일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직무유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언제부터 살충제와 발암물질에 계란이 오염되고 유통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김재수·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손문기·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처음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돼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곧바로 우리나라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소비자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시 대비해 헌혈합니다” 을지훈련 기간인 23일 광주서 서구청에서 공무원 40여명이 전시에 대비한 헌혈을 하고, 장기 기증에도 서약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70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일당 17명 검거

중국에서 7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김모(43)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박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심전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72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5차례에 걸쳐 도메인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대표통장 100여개와 대표폰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씨 등은 월 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며 20대 무직 청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불법 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시켰다. 수익금은 생활비와 유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사이트에서 회원 2000여명이 불법 도박을 했으며 많게는 한 사람이 6억~7억원까지 베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 및 상술·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3년전 수사 부실했나

### 70대 할머니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용의자 DNA 3년전 숨진 40대女 시신서 검출한 DNA와 일치

조용했던 신안의 한 섬마을이 70대 할머니 살인사건 이후 흉흉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며 서로 입단속을 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조차 꺼리고 있다.

특히 3년 전 같은 마을에서 돌연 숨진 40대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DNA와 최근 할머니를 살해한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3년 전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할머니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경찰수사에도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목포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의 한 섬마을에 사는 박모(30)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같은 마을에 사는 A(여·77)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는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애초 같은 마을 주민인 A씨 집에 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얼굴을 이불로 덮어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폭행하려고 홀로 살던 A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지적장에 2급으로 알려진 박씨는 마을 주민들과 자주 시비가 붙어 폭행하기도 했지만, 숨진 A씨와는 갈등을 빚거나 자주 원망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루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 끝에 지난 19일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22일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적 할머니 살해 사건으로 마무리된 듯 했던, 이 사건은 경찰의 DNA 검사 이후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경찰이 박씨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DNA 검사에서, 박씨의 DNA와 지난 2015년 같은 마을에서 병사(病死)처리된 B(여·49)씨의 몸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남편사별 이후 홀로 지내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부검한 뒤 간경화, 고혈압 등 질병에 따른 병사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B씨의 몸에서 남성의 DNA를 채취했음에도 누구의 것인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숨진 B씨는 발견 당시 입고 있던 옷이 흐트러져 있는 등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면 60여 가구,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범죄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은 30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의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일반적으로 부검은 타살의혹이 있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면 “특히 숨진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DNA가 나왔다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왜 내사 종결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상대로 할머니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같은 마을에서 3년 전 발생한 40대 여성 병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숨진 40대 여성에게서 채취한 DNA와 박씨의 DNA가 일치하지만, 살인 연관성 등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좋아하는 피자 브랜드 우기다... 피자 먹던 친구들 주먹다짐


“함께 특정업체의 피자를 먹던 친구들이 서로 좋아하는 브랜드의 피자가 맞다고 말다툼하다 주먹다짐까지 벌여 경찰서행.”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N피자집에서 피자를 먹던 중 친구인 B(24)씨가 대형 업체인 D피자가 더 맛있다고 하자, 핫김에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대형업체인 D피자가 더 맛있다고 말하자, 친구가 중소기업에서 만든 N피자가 더 맛있다고 한 뒤 얼굴을 3차례나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 B씨 두 명을 모두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